

[인사이드칼럼] `외교의 계절` 한국외교 단상

기사입력 2015.09.29 17:24:17 | 최종수정 2015.09.29 20:40:06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가을에 접어들며 다양한 외교 일정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9월 2일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9월 25일 미·중 정상회담, 9월 말 제70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 10월 말 한·중·일 정상회담, 11월 하순 마닐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쿠알라룸푸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정상회담, 터키 안탈리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연내 방일 가능성과 9월 초 불발로 끝난 아베 신조 총리 방중의 재추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복잡하고 다원적인 외교게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내부적으로 확대되는 시장 정보와의 싸움에다 외화수입 감소로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모순적인 핵·경제발전 병진 노선을 지속할 것인지 주목된다.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해결 동력이 상실된 채 표류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북한의 `운반 가능한 핵` 무장의 완성은 우리로부터 통일의 꿈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 우리 주도로 유인과 압력 조치들을 시차적으로 결합한 포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 미·중·일·러 4개국과 함께 북한에 협상 재개를 압박해야 한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구체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흡수통일 불추구 선언 등 과감한 접근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동북아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세력 전환의 향방이 핵심이다. 최근 중국의 경제사회적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전환 속도가 감속되고는 있지만, 추세상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압도적 비중은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럽에서 독일·프랑스·영국·러시아 등 역내 다수의 강대국이 존재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지속적 아시아 관여가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은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원배분 필요성, 국방비 감축, 고립주의적 국내 여론 등 제약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서 한국·일본·호주 등 동맹국 협력과 인도·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 관계 강화는 필수적이다. 최근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도 이런 큰 흐름의 일환이지만 우리에게 양날의 칼이다. 중국 부상에 대한 세력균형 확보와 대북 억지력 증가라는 긍정적 요소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조치로 인한 동북아 전략환경 악화 우려와 역사수정주의에 빠진 `우경화 일본`의 군사력 증

강 위험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우리는 한반도에 대한 결정권을 확실히 하고 동북아 전략 환경의 악화를 막으며 동북아 신뢰 구축을 증진하는 실용적 대응을 해야 한다.

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남중국해 문제와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이 관심의 초점이다.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의 인공도서 매립 및 군사 시설 건설이 해로자유통항을 위협하는 데 기인한다. 여기에다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 및 국제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9단선 주장까지 겹쳐 미국은 매우 강한 입장이다. 무역국이자 해운국인 우리로서도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한편 8월 교섭 타결을 목표로 했던 TPP는 의약품 특허, 낙농제품 관세를 둘러싼 대립으로 결렬돼 오바마 행정부 임기 내 타결이 불투명하다. 발효 후 가입 교섭을 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시간을 벌었지만, 아태 지역의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 짝짓기 흐름에 선제적 대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는 불안한 중국 경제를 포함한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질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산적한 경제사회 문제, 정책대응 미숙, 신뢰 위기 등으로 인해 신창타이(新常态)로 가는 중국 경제의 길이 순탄치 않고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신흥국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역순환도 세계금융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크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경제가 저조하고, 개도국 경제는 성장하는 남고북저(南高北低)의 추세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변화에 맞추어 한발 앞서 시장·산업·생산기지 전환을 꾀해야 한다.

세계화·정보화·자동화로 인해 세계 정치경제 지형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전략 환경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외교에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만큼 중견 국가에 걸맞게 숙려하면서도 기민하게 행동해 독자적 전략 공간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대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